

주간 통일정세

2017-33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8.12	北 “미제 보복의지로 347만 입대·재입대 탄원”(연합뉴스)
	8.14	“北, 주요국 대사 평양으로 불러 회의 개최”(연합뉴스)
		北, 연일 체제수호 강조…“내부결속에 외부정세 활용”(연합뉴스)
		北, 한미연합훈련 비난…“우발 사건 땀 전쟁 못 막아”(연합뉴스)
	8.15	北 김정은, 판 사격 보고받아…“미국 행태 좀 더 지켜볼 것”(연합뉴스) 김정은, 보름만에 공개활동…北 매체 충성 독려(연합뉴스)
8.17	北 “안보리 제재는 생존권 말살…즉시 무효화해야”(연합뉴스)	
군사	8.13	38노스 “북한 SLBM 시험발사 준비징후 포착”(연합뉴스) 서주석 국방차관 “北 재진입 기술 확보에 1~2년 이상 걸릴 것”(연합뉴스)
	8.15	北 전략군, 남한 전역 4등분해 미사일 타격권 설정(연합뉴스) 우크라 전문가 “탄도미사일 기술 北 유출 가능성 배제 못 해”(연합뉴스)
		8.16
	경제	8.13
8.16		중국 대북 에너지 수출 ‘뚝’…“北 경제자립도 높아져”(연합뉴스)
8.17		中 대북 식량수출 급증…“北 경제성장에도 굶주림 여전”(연합뉴스)
사회 문화	8.12	北, 건설 활동 독려 ‘선봉대칭호’ 제정(연합뉴스) 평양과기대 의대 가을학기 수업중단…美, 대북 여행금지 여파(연합뉴스)
	8.13	“北시민들, 제재에 분노·트럼프 위협엔 침착”…日언론 北 르포(연합뉴스)
	8.16	RFA “北, 평양 인구 200만 명으로 감축 작업 진행”(연합뉴스) 美 민간연구소 “北인구 2천 550만명…2030년부터 증가세 둔화”(연합뉴스) 北 김일성대, 이달 中대학과 사회과학 학술토론회(연합뉴스)
		8.12
8.13	폼페오 美 CIA 국장 “미·북 핵전쟁 임박 암시하는 정보 없다”(연합뉴스)	
8.14	美 안보보좌관 “일주일 전보다 北과의 전쟁 가까워지지 않아”(연합뉴스) 美 국무·국방 “北변화 위해 외교수단 선호…그 뒤에 군사옵션도”(연합뉴스)	

	中, 북한산 석탄·철·수산물 금수...北 수출 63% 감소(연합뉴스)
	쿠웨이트 "안보리 결의 준수"...대북 비자발급 부인(연합뉴스)
8.15	中, 北 겨냥 "美의 외교적 해결우선 노력에 호응해야" 촉구(연합뉴스)
	北 "日, 적대정책 전환하고 우리와 과거청산 나서야"(연합뉴스)
	김정은-푸틴, 광복절 맞아 축전교환..."친선강화 이익 부합"(연합뉴스)
	EU "北, 추가도발 말라...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수단으로 이뤄야"(연합뉴스)
8.16	틸러슨 "북·미 대화 노력 계속할 것, 김정은에 달려"(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현명한 결정해...안 그랬으면 재앙적 결과"(연합뉴스)
	팔레스타인 수반, 북한 김정은에 광복절 축하 전보 보내(연합뉴스)
8.17	美, 대북대화 3대 조건 제시..."핵·미사일·도발언행 중단"(연합뉴스)
	日, 北 대비 미사일방어 강화 '속도'...'이지스 어쇼어' 조기 도입(연합뉴스)
8.18	美 하원의원 "사이버 공격으로 北미사일 능력 무력화해야"(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8.15	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시찰	황병서, 김정식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8. 15.

■ 北 김정은, 꺾 사격 보고받아…“미국 행태 좀 더 지켜볼 것”(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꺾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사령부 지휘소에서 전략군이 준비중인 꺾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의 보고를 받고 만족감을 표시한 뒤 “미제의 군사적 대결 망동은 제손으로 제목에 올라가미를 거는 셈이 되고 말았다”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에 충고하건대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불리한지 명석한 두뇌로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함.

■ 김정은, 보름만에 공개활동…北 매체 충성 독려(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전략군사령부를 14일 시찰한 것은 보름 만에 재개된 그의 공개 행보임.
- 북한 매체에 보도된 김 위원장의 직전 공개 활동은 지난달 3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경축연회에 참석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장기 ‘잠행’이 이어지며 여러 관측이 제기된 바 있음.
- 한편 북한은 광복절인 15일 내부적으로는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화 선전을 강화하며 김 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독려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8. 14.

■ “北, 주요국 대사 평양으로 불러 회의 개최”(연합뉴스)

-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주요국 대사를 소집해 ‘공관장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정부 관계자는 14일 “북한이 현재 주요국 대사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일종의 공관장 회의 성격의 대사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번 회의 참석자에는 지재룡 주중국대사, 김형준 주러시아대사, 자성남 주유엔 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8. 12.

■ 北 “미제 보복의지로 347만 입대·재입대 탄원”(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비난하며 ‘정의의 행동’을 선포한 정부성명 발표 이후 사흘 만에 347만 5천 명이 인민군 입대와 복대(재입대)를 탄원했다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전쟁 광기를 부리고 있는 미제에 대한 분노와 천백 배의 보복의지를 폭발시키며 전민이 조국결사 수호의 성전에 총궐기해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이 신문은 “황해북도에서 8월 9일 하루 동안에만도 8만 9천여 명의 청년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탄원했다”며 “(평안남도) 대동군에서는 군 안의 2만여 명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탄원했다”고 소개함.

2017. 8. 14.

■ 北, 연일 체제수호 강조…“내부결속에 외부정세 활용”(연합뉴스)

- 미국을 향해 ‘괘 포위사격’ 위협에 나선 북한이 내부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체제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음.
- 북한 노동신문은 14일 ‘천만이 총폭탄 되리라’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사설에서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 것보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제일 가는 영광은 없다”고 주장함.

- 이어 “이 한 몸이 그대로 ‘화성’(탄도미사일)이 되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원수들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들부시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 누구나의 보복 열기”라며 “천만이 총폭탄 되어 미제의 최후 멸망을 앞당기자”고 선동함.

■ 北, 한미연합훈련 비난…“우발 사건 땀 전쟁 못 막아”(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21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해 “설사 누가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사소한 우발적 사건으로 불꽃이 튀긴다면 그 어떤 힘으로도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위협함.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미국은 자멸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극도로 악화된 조선반도 정세 하에서 대규모 핵전쟁 연습의 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명명백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함.
- 중앙통신은 이번 UFG 연습의 성격과 관련, “(미국이) 대대적인 무력투입을 떠들고 있다”면서 “아무리 연례화, 정례화, 방어적 성격을 논하여도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절대로 약화시킬 수 없다”고 강변함.

2017. 8. 17.

■ 北 “안보리 제재는 생존권 말살…즉시 무효화해야”(연합뉴스)

- 북한이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법률가 단체를 동원해 주장함.
-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체계적으로 유린 말살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반(反)공화국 제재결의들이 무효”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위원회는 어떤 국가도 집행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국제관계의 ‘절대 규범’인 ‘강행법규’에 대량학살 금지와 노예무역 금지, 생존권 보장이 속한다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인륜 범죄”라고 밝힘.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8. 13.

■ 38노스 “북한 SLBM 시험발사 준비징후 포착”(연합뉴스)

- 북미긴장 고조 속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해상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보도함.
- 13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는 지난 7일 북한 신포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포 조선소에 정박 중인 신포급 잠수함 전방과 후방 갑판이 위장망 혹은 방수포로 덮여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런 위장은 잠수함의 새로운 활동 정황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SLBM인 북극성-1이 지난 7월 시험 발사되기 전에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음.
- 38노스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포 조선소에서 미사일 ‘콜드런치’ (cold-launch·냉발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사출시험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SLBM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2017. 8. 15.

■ 北 전략군, 남한 전역 4등분해 미사일 타격권 설정(연합뉴스)

- 15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전략군사령부 지휘소 내부 모습을 보면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광 포위사격 방안을 보고받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뒤로 3개의 지도가 벽면에 걸려 있는 가운데 ‘남조선 작전지대’에는 우리나라 전역을 4개로 구분한 라인이 그어져 있고, 그 라인 끝마다 미사일 기종으로 추정되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 글씨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 식별되지 않음.
- 4개의 라인이 그어진 곳은 군사분계선(MDL) 축선-울진권역-포항권역-부산 앞바다 등이며, 4개의 도표가 지도에 그려져 있는데 각 라인 안에 있는 주요 부대와 국가전략 핵심시설 등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신중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북한이 우리나라 전역을 4등분해 미사일 타격권역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타격권역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우크라이나 전문가 “탄도미사일 기술 北 유출 가능성 배제 못 해”(연합뉴스)

- 옛 소련 국가 우크라이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관한 미국 언론 보도에 이어 우크라이나 미사일 설계사무소에서 일한 한 전문가도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함.
- 우크라이나 로켓 발사체(미사일) 개발 전문 국영 설계사무소 ‘유즈노예’에서

근무했던 한 전문가는 14일(현지시간) 자국 온라인 언론매체 ‘스트라나’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할 돈이 없다”면서 “그들이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접근하는 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혔을 것”이라며 미사일 기술 유출 가능성을 시사함.

- 이 전문가는 “몇 년 전 북한 기술자들이 유즈노예에서 미사일 관련 문서를 훔치려 시도한 사건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그같은 시도는 곧 탄로 났고 기술자들은 체포됐으며 문서는 되찾았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서가 이후 다시 북한 수중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정함.

나. 한국 및 미국

2017. 8. 13.

■ 서주석 국방차관 “北 재진입 기술 확보에 1~2년 이상 걸릴 것”(연합뉴스)

-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3일 방영된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재료공학적으로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미 모두 아직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 면에서 점점 다가가는 게 사실이고 시점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수준에 관해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왔고 지금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하는 것에 거의 근접했다는 게 정부의 공식적 판단”이라고 말함.
- 서 차관은 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이 최근 한 것은 이른바 전략적 도발이라고 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인데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며 “실제로 미사일이나 투발 수단으로 바로 공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함.

2017. 8. 16.

■ 北 미사일위기 상황서 주한미군에 패트리엇 미사일 대거 배치(연합뉴스)

- 미국이 고조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에 성능이 개량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대거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 미 육군은 미 공군기지 방어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산하 제35 방공포여단이 패트리엇 미사일 현대화작업과 운영 요원들의 기량 향상 훈련(exercise)을 완료했다

고 15일(현지시간) 밝힘.

- 미 육군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지속적인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을 위해 제35 방공포여단 산하 1개 대대가 방산업체 레이시온 및 이 미사일 체계 관리 전담기구(LTPO)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개월간 최대 규모의 현대화작업과 요원 숙련도 향상 훈련을 끝냈다고 확인함.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2017. 8. 13.

■ 北, 'R&D 투자-지적재산 상품화' 독려(연합뉴스)

- 북한이 개별 기업들에 대해 연구·개발(R&D)에 대한 자금 투자를 늘리고, 대학과 연구기관도 과학연구 결과를 화폐 수입으로 전환하라고 독려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됨.
-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7년 2호(6월 10일 발행)에 실린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서 자금 투자'라는 제목의 논문에는 이 같은 북한 당국의 과학기술정책이 자세히 소개됨.
- 논문은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자금 투자를 늘리는 데서 중요한 것은 공장, 기업소들이 자체 자금을 과학기술 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별 기업들의 책임을 강조함.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8. 13.

■ 네덜란드 언론 "북한산 의류, 중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돼"(연합뉴스)

- '메이드 인 차이나' 상표가 붙어 수출된 의류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네덜란드 언론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함.
- 네덜란드 인터넷신문인 'nu.nl' 은 이날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 있는 익명의

- 몇몇 상인과 사업가들의 말을 토대로 전한 로이터통신을 인용, 중국 의류 회사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며 이같이 전함.
- 신문은 북한의 모든 의류 공장은 국가 소유지만 수출입 의류들은 대북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중국 무역업자들이 북한에서 의류를 생산하면 비용을 최대 75%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의류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러시아 수출품에도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

2017. 8. 16.

■ 중국 대북 에너지 수출 ‘뚝’...“北 경제자립도 높아져”(연합뉴스)

- 북한의 경제자립도가 높아지고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중국의 대북한 에너지 수출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한 전력 수출은 지난해 2분기 1천 54만 2천330kW/h에서 올해 2분기 23만 7천 953kW/h로 무려 97.7% 급감했으며, 석유·가스 제품 수출은 같은 기간 7만 9천에서 3만 5천으로 56.2% 줄었는데, 여기에는 압축천연가스, 휘발유, 항공연료 등이 포함됐지만 원유는 포함되지 않음.
- 다른 품목의 수출도 크게 줄어 북한으로의 콘크리트 수출은 61.3%, 냉동 소고기는 91.3% 급감했지만, 오히려 올해 1분기에 북한이 중국에 7천 152만 6천 180 kW/h의 전력을 수출해 23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남.

2017. 8. 17.

■ 中 대북 식량수출 급증...“北 경제성장에도 굶주림 여전”(연합뉴스)

-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세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옥수수 1만 2천724t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2배 급증함.
- 바나나 수출은 지난해 2분기 63t에서 올해 2분기 1천 156t으로, 밀가루 수출도 같은 기간 0.6t에서 7.6t으로, 증류주 수출은 210만 ℓ에서 950만 ℓ로 늘었으며, 맥주, 과자, 초콜릿, 빵, 비스킷 등의 수출도 증가함.
- 아직 불완전한 통계이기는 하지만, 쌀 수출도 350만t에서 1천 100만t으로 늘었는데, 중국의 대북 식량·식품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이 아직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SCMP는 분석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8. 12.

■ 北, 건설 활동 독려 '선봉대칭호' 제정(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북한)에서 5월21일 선봉대칭호가 제정됐다”며 “당의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군대와 사회의 건설부대, 단위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이며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건설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게 하려고 칭호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10일 칭호를 제정하는 정령을 채택했으며, 이 통신은 5월 21일이 1946년 김일성 주석이 보통강 개수공사의 첫 삽을 뜬 날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1년 ‘건축예술론’을 발표한 날이라고 소개함.
-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여명거리 건설에 참여한 군인과 건설자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키로 하는 정령을 채택함.

2017. 8. 16.

■ RFA “北, 평양 인구 200만 명으로 감축 작업 진행”(연합뉴스)

- 북한이 260여만 명에 달하는 평양시 인구를 200만 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이 방송은 2010년 당시 300여만 명이던 평양시 인구가 수차례의 평양시 지역축소(구역조정)와 인구조정(추방) 작업을 거치면서 현재 260여만 명으로 줄어든 상태라는 소식통들 전언을 전하면서 이같이 보도함.
- 평양시 중구역의 한 소식통은 “2010년까지만 해도 300여만 명에 달하던 평양시 인구가 현재는 260만 명 선으로 줄어든 상태”라면서 “이번에 다시 평양시 인구를 200여만 명으로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RFA에 전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8. 12.

■ 평양과기대 의대 가을학기 수업중단…美, 대북 여행금지 여파(연합뉴스)

- 북한 유일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교수진의 방북이 어려워져 의학대학의 올해 가을학기 수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함.
- 평양과기대 의학대학 관계자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평양과기대의 미국인 교수들이 현재 특별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지만 승인을 받더라도 가을학기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기는 시간이 촉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힘.
-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로 평양과기대 전체 외국인 교수의 3분의 2가 방북하지 못하게 됐으며 다른 과의 가을학기 수업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교수에 의해 제한적으로 진행됨.

2017. 8. 13.

■ “北시민들, 제재에 분노·트럼프 위협엔 침착”…日언론 北 르포(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 사이 고강도 설전이 오가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양에서 ‘개전(開戰) 전야’ 같은 긴장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북한 현지 분위기를 전함.
- 통신은 13일 르포 기사를 통해 평양 시민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결의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지만 생활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소개함.
- 평양 시내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밑에서 단결해 미국의 악질적인 제재와 압력을 단호하게 분쇄하자”는 플래카드가 걸린 가운데 미국과의 대결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음.

2017. 8. 16.

■ 美 민간연구소 “北인구 2천 550만명…2030년부터 증가세 둔화”(연합뉴스)

- 북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30년부터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

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이 공개한 세계인구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017년 현재 2천 5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0만 명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2천 6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방송은 전함.
- 하지만 PRB는 북한의 인구증가 추세가 2030년을 정점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 다며 이는 북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北 김일성대, 이달 中대학과 사회과학 학술토론회(연합뉴스)

- 16일 김일성대 홈페이지 ‘룡남산’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공지글에서 “김일성 종합대학과 중국의 지린대학과의 국제 학술토론회가 2017년 8월 22일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서 진행된다”고 밝힘.
- 대학은 “‘전통과 계승, 사회적 진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 는 사회정치학 분과와 경제학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설명함.
- 이어 “이번에 진행되는 국제 학술토론회는 서로의 학술적 의견들을 교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힘.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8. 12.

■ “북미 ‘뉴욕채널’ 수개월간 비밀 접촉…美 조셉윤-北 박성일”(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 간 비밀 접촉(engaging in backchannel diplomacy)을 해오고 있다고 AP 통신이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1일(현지 시간) 보도함.
- 이를 통해 북핵·미사일로 인해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송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들이 AP에 밝힘.
- 양국 간 대화 통로는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로, 이른바 ‘뉴욕 채널’이 재가동된 것이라고 이들 관계자는 전했으며, 윤 특별대표와 박 차석대사의 접촉이 정기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함.

■ **美 “지금은 北과 대화 기회 아냐…北 문제해결 의지 없어”(연합뉴스)**

- 패트릭 머피 미국 국무부 동남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뉴욕 채널’을 재가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대북 강경 발언이 계속되는 배경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할 기회가 아니다”라고 말함.
- 머피 부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화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히며, “국무부 장관은 대화도 옵션의 하나라고 거듭 강조해왔으나 북한은 책임과 요구사항을 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구를 그만두는 것에 (대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안다”고 강조하는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이번 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과 ARF에서 북한을 퇴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 **트럼프 “김정은, 꺾에 대한 어떤 행동도 빠르게 후회하게 될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그가(김정은이) 꺾이나 다른 곳에 대해, 그곳이 미국 영토이든 동맹국이든,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 그는 진짜로 그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빠르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내가 말한 것의 중대함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함.
- 이는 최근 며칠간 북한을 향해 연이어 내보낸 강력한 경고 메시지의 엄중함을 김정은 정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성 주문을 재차 한 것으로 풀이됨.

2017. 8. 13.

■ **폼페오 美 CIA 국장 “미·북 핵전쟁 임박 암시하는 정보 없다”(연합뉴스)**

- 폼페오 국장은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사실로 가정하는데, 나는 우리가 오늘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말함.
- 미 정보기관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지난주 주고받는 ‘말 폭탄’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일각에서 거론된 전쟁 임박설을

부인한 것임.

-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군사적 해법, 특히 선제공격 가능성도 한층 낮아진 것으로 전망됨.

2017. 8. 14.

■ 美 안보보좌관 “일주일 전보다 北과의 전쟁 가까워지지 않아”(연합뉴스)

-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10년 전 보다는 북한과의 전쟁에 가까워졌지만, 한 주 전보다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매우 매우 분명하다”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의 합치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과 동맹이 이 불량 정권(북한 정권)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고 어떤 대응에 직면할지가 모호하다면 (북한의 도발)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함.

■ 美 국무·국방 “北변화 위해 외교수단 선호…그 뒤에 군사옵션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들이 북한의 정권교체에는 관심이 없으며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
- 그러면서도 군사적 옵션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같이 언급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함.
-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평양에 책임을 묻겠다’(We are Holding Pyongyang to Account)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평화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2017. 8. 16.

■ 틸러슨 “북·미 대화 노력 계속할 것, 김정은에 달려”(연합뉴스)

-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대화

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대한 관심을 지속하겠다”고 말함.

- 그는 “그러나 그것은 그(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임.
-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의 미국령 괌 포위사격 업포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나는 그의 결정에 응답할 생각이 없다”고 함.

■ **트럼프 “김정은, 현명한 결정해…안 그랬으면 재앙적 결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괌 포격을 위협하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평가함.
-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같이 말하고, “만약 안 그랬으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는 미국령 괌에 포위사격을 하겠다고 업포를 냈던 북한이 지난 15일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임.

2017. 8. 17.

■ **美, 대북대화 3대 조건 제시…“핵·미사일·도발언행 중단”(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과 가까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핵 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 등 3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힘.
-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외신기자 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북·미 대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그는 “미국은 가까이 북한과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것이나 우리는 아직 ‘그 지점’(that point) 근처에 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그러면서 북한에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함.

2017. 8. 18.

■ **美 하원의원 “사이버 공격으로 北미사일 능력 무력화해야”(연합뉴스)**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 무력화를 위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제기됨.
- 다나 로라베이커(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핵 참사를 위협하는 김정은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 그는 역대 정부의 북핵 대처와 관련해 “북한 정권은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단계마다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했고, 우리 정부는 정기적인 뇌물로서 대응했다”며, “이러한 악순환이 북한 독재자를 길들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광기였다”며 “광기의 순환은 끊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그는 미 국방부에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격추하는 동시에 북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을 요구함.

나. 북·중 관계

2017. 8. 14.

■ 中, 북한산 석탄·철·수산물 금수··北 수출 63% 감소(연합뉴스)

- 중국이 14일 북한산 제품의 3분의 2에 대해 전격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함.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15일부터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힘.
- 금지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이며, 이번 조치로 북한의 수출액이 3분의 2가 줄면서 큰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2017. 8. 15.

■ 中, 北 겨냥 “美의 외교적 해결우선 노력에 호응해야” 촉구(연합뉴스)

- 미국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데 대해 중국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북한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라고 촉구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길 바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화 대변인은 “북한 역시 미국의 노력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길 요청한다”면서 “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다. 북·일 관계

2017. 8. 15.

■ 北 “日, 적대정책 전환하고 우리와 과거청산 나서야”(연합뉴스)

- 북한이 광복절인 15일 일본의 과거사 책임 회피를 비난하며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과거 청산’에 나서라고 일본에 요구함.
- 북한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일본 당국은 때를 놓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스스로 반(反)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여 우리와의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대변인은 “일본이 반인륜적 과거 범죄에 대하여 아무리 분칠을 하며 아니라고 뻔대어도 국제사회는 오직 진실만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라며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저들의 숙명”이라고 지적함.

2017. 8. 17.

■ 日, 北 대비 미사일방어 강화 ‘속도’...‘이지스 어쇼어’ 조기 도입(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NHK가 17일 보도함.
-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SM3)을 지상에 배치하는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설계비를 넣기로 함.
- 원래는 내년도 예산에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조사 비용을 넣을 방침이었지만, 배치 계획을 앞당겨 내년 바로 설계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임.

라. 북·러 관계

2017. 8. 15.

■ 김정은-푸틴, 광복절 맞아 축전교환...“친선강화 이익 부합”(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자 3면에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교환한 광복절 축전을 나란히 게재함.

- 이 신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 위원장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귀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붉은 군대 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을 경건히 추억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이의 친선관계와 건설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이바지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힘.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8. 14.

■ 쿠웨이트 “안보리 결의 준수”…대북 비자발급 부인(연합뉴스)

- 쿠웨이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쿠웨이트가 앞으로도 북한 노동자의 취업비자를 계속 발급할 것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를 부인함.
- 주한 쿠웨이트대사관은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쿠웨이트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관련 기구가 주도하는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힘.
- 대사관 측은 위원회가 (관련 부처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과 북한과 영업행위, 대북송금, 쿠웨이트기금 대출 업무, 대북 화물선적 금지,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 감축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함.

2017. 8. 15.

■ EU “北, 추가도발 밀라…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수단으로 이뤄야”(연합뉴스)

-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4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간 잇따른 ‘말의 전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북한에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자제할 것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에 군사적 해법이 아닌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함.
- 모게리니 대표는 또 EU는 한국의 주도로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긴장고조로 인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함.

-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정치안보위원회(PSC)를 열어 최근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힘.

2017. 8. 16.

■ 팔레스타인 수반, 북한 김정은에 광복절 축하 전보 보내(연합뉴스)

-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이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광복절 축하를 보냈다고 중동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팔레스타인 와파통신 등에 따르면 아바스 수반은 전날 전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72회 광복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 아바스 수반은 이 전보에서 북한 국민은 그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해 싸웠으며 그들의 원칙을 위해 희생을 했다고 전했고, 그는 또 북한이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유와 자결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을 지지해 왔다고 평가함.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8.14	한국 국방부 “미-한 연합훈련 규모 조정 검토하지 않아”(미국의소리)	
	8.16	임성남 외교차관, 美부장관 통화…“미사일 지침 조기 개정”(연합뉴스)	
	8.17	한국 군, 미사일 탄두 중량 ‘무제한’ 추진…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 (미국의소리)	
	8.18	한미FTA 공동위 22일 서울 개최…개정 논의 착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8.14	‘한중수교 25주년’ 반쪽 행사 막으려 안간힘…“상호 참석 논의”(연합뉴스)	
	8.15		中관영매체들, 을지훈련 중단 촉구…“韓, 북미간 중재자 역할해야”(연합뉴스)
			中, 文대통령 北대화촉구 발언에 “남북대화 지지”(연합뉴스)
	8.16		中, 한반도서 韓동의없는 군사행동 불가발언에 재차 지지 표명(연합뉴스)
	8.17		中, ‘사드 한미중 3자회담’ 제안에 “韓반대여론 달래려는 의도” (연합뉴스)
		中매체들, 文대통령 “한반도 전쟁 다시 없을것” 발언에 주목(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8.14		日정부 “韓버스 소녀상 설치는 있어서는 안될 일” 불쾌감(연합뉴스)
	8.15	정부, 日지도자 야스쿠니 공물료 납부·참배에 “깊은 우려”(연합뉴스)	
	8.17		日 “징용 피해자 개인청구권 없다”...文대통령 발언 반박(연합뉴스)
	8.18		‘징용 청구권’ 文대통령 발언에 日정부 항의...“한일관계에 찬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8.17	강경화 외교 25일 방러...“러 외무와 한반도 정세 등 논의”(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8.12		시진핑, 트럼프에 “대화·담판으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해야”(연합뉴스)
	8.13	트럼프 미 대통령·시진핑 중국 주식 전화 통화...북한 문제 논의(미국의소리)	
	8.14		中, 美에 무역전쟁 경고...“무역보복 조치 부메랑 될 것”(연합뉴스)
	8.15	트럼프 대통령, 중국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행정명령(미국의소리)	中신화통신, 美에 “일방주의 행동으로 문제해결 못해” 경고(연합뉴스)

	8.16	美中 군 수뇌부 협력강화 합의...던퍼드, 북중 접경부대 방문(연합뉴스)	
	8.17	中, 美 한미연합훈련 지속 발표에 반발...“쌍중단이 최선”(연합뉴스)	
	8.18	시진핑, 미군 합참의장에 “북중접경 방문, 미중 군사관계 진전”(연합뉴스)	
	8.18	무역전쟁 ‘갈가논’ 中, 보잉·콩·자동차 대미 보복카드 만지작(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8.14	日언론 “日정부, 트럼프 9월 방일 추진...아베와 북한문제 논의”(연합뉴스)	
미일 관계	8.15	트럼프-아베 통화...“北미사일 발사 강행 저지가 최우선”(연합뉴스)	
	8.17	美日 “북한문제 긴박상태 계속”...日방위상 “다양한 제재 필요”(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8.14	러 외무부 “한반도, 무력충돌 위험에 아주 가까이 접근”(연합뉴스)	
		미·러, 한국전 포로·실종자 확인 공동위 실무회의 열어(자유아시아방송)	
미러 관계	8.15	러 외무부 “한반도 위기 악화하면 국제전으로 번질 수도”(연합뉴스)	
	8.15	러 외무차관 “美北 판돈 높이는 위험한 게임...막다른 골목行”(연합뉴스)	
	8.17	러 외무부 “美 대북 군사공격은 지구종말론적 시나리오”(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8.13	中군용기, 오키나와 부근 비행...日전투기 긴급발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8.15	중·러 외교수장 전화통화...왕이 "8월 위기 막아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8. 14.

■ 한국 국방부 “미-한 연합훈련 규모 조정 검토하지 않아”(미국의소리)

- 한국 국방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함.
- 국방부 이진우 공보과장은 오늘(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한 연합훈련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어 목적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연례 훈련이라고 설명함.
- 또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해상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 노스’의 보도에 대해 북한 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힘.

2017. 8. 16.

■ 임성남 외교차관, 美부장관 통화…“미사일 지침 조기 개정”(연합뉴스)

-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 밤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힘.
- 양 차관은 1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 및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견인의 기초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미사일 지침 조기 개정을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설리번 부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 측 인사가 최근 여러 계기에 언급해 왔듯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경제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미국의 모든 대응과 조치는 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힘.

2017. 8. 17.

- **한국 군, 미사일 탄두 중량 '무제한' 추진...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미국의소리)**
 -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잇따른 도발에 대한 자위적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제한돼 있는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안보에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발언함.
 -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처음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때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것 같다'고 발언함.

2017. 8. 18.

- **한미FTA 공동위 22일 서울 개최...개정 논의 착수(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함.
 - 산업부는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산업부는 "한미 FTA가 발효 이래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나. 한·중 관계

2017. 8. 14.

- **'한중수교 25주년' 반쪽 행사 막으려 인간힘...“상호 참석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갈등으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를 각기 따로 열기로 하면서 양국 당국자들이 반쪽 행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중 한국대사관은 14일 한국과 중국이 각각 24일과 23일 개최하는 수교

기념행사에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기로 하고, 참석 인사의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양국은 오는 23일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 주최로 열리는 기념행사에 한국대사관 측 관계자들이, 24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기념행사에는 중국측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하기로 함.

2017. 8. 15.

■ 中관영매체들, 을지훈련 중단 촉구...“韓, 북미간 중재자 역할해야”(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될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촉구함.
- 특히 환구시보는 “정세 안정을 위해 한국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극본이 짜여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 환구시보는 이어 “한미 을지훈련은 북한을 전보다 더 강력히 자극할 것이 분명하며 북한은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어 이번 한미 군사훈련은 의외의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전보다 더 높다. 한국이 한반도 전쟁을 결연히 반대한다면 이번 한미 군사훈련의 무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

■ 中, 文대통령 北대화촉구 발언에 “남북대화 지지”(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가 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 중 대북 발언에 대한 중국 측 평론을 요구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어 “중국 측은 일관되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처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유관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민감하며 임계점이 가까워 결단을 내리고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발언함.
- 화 대변인은 아울러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양측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남북 양측이 이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서 현재 경색된 국면을 타파하고 대화 협상을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 한다”고 강조함.

2017. 8. 16.

■ 中, 한반도서 韓동의없는 군사행동 불가발언에 재차 지지 표명(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 72주년 경축사에서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이 재차 지지 의사를 밝힘.
-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전날 이미 이와 관련된 중국 측 입장을 밝혔다”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함.
- 화 대변인은 “각국이 자국민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관점에서 출발해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며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임.

2017. 8. 17.

■ 中, '사드 한미중 3자회담' 제안에 “韓반대여론 달래려는 의도”(연합뉴스)

- 중국 관영매체와 관변학자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중 3자 회담 제안에 대해 “한국의 반대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라는 주장을 함.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일 ‘한국의 사드회담 제안은 국내 반(反) 사드 달래기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함.
- 정지용(鄭繼永) 중국 푸단(復旦)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도 “사드배치 3자회담 제안은 아마도 한국 내 사드 반대 세력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환구시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함.

■ 中매체들, 文대통령 “한반도 전쟁 다시 없을것” 발언에 주목(연합뉴스)

- 중국 관영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함.
- 중국 중앙(CC)TV는 이날 오후 톱뉴스로 “문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은 북한에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인민망(人民網)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하고, 환구망(環球網)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나지 않을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으며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에 특사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중점적으로 보도함.

다. 한·일 관계

2017. 8. 14.

■ 日정부 “韓버스 소녀상 설치는 있어서는 안될 일” 불쾌감(연합뉴스)

- 한국의 운수회사가 서울 시내버스에 소녀상을 설치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한 불쾌감을 보임.
-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위성방송 BS 후지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와 관련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한일합의는 국제적 약속이니 정부 상호간 노력해야 한다. (한국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발언함.
- 그는 한국 정부의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수정 움직임에 대해 “지금까지 (축구의) 골포스트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비꼬며 “양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위안부 합의)를 했다”고 발언함.

2017. 8. 15.

■ 정부, 日지도자 야스쿠니 공물료 납부 참배에 “깊은 우려”(연합뉴스)

- 정부는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공물 대금 납부 및 일본 여야 의원 수십 명의 신사 참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의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 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힘.
- 이어 “일본의 정치인들은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함.

2017. 8. 17.

■ 日 “징용 피해자 개인청구권 없다”…文대통령 발언 반박(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반발함.
- 요미우리신문은 “징용공 청구권 문제는 1965년 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함.
- 이어 일본 외무성 간부가 “(개인 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함.

2017. 8. 18.

■ ‘징용 청구권’ 文대통령 발언에 日정부 항의…“한일관계에 찬물”(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에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구축을 지향하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라고 항의함.
- 신문은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에 대해 한일 및 미국 등이 결속해 대응하는 미묘한 시기에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일본내 한일관계 소식통)이라는 개탄의 소리도 적지 않다고 보도함.

라. 한·러 관계

2017. 8. 17.

■ 강경화 외교 25일 방러…“러 외무와 한반도 정세 등 논의”(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통신은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며, 이 관계자는 “모든 상호 관심사가 거론될 예정이며 한반도 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 강 장관은 이번 방러를 통해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6~7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의제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8. 12.

■ 시진핑, 트럼프에 “대화·담판으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해야”(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결국 대화와 담판이라는 정확한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상호 존중 기초 아래 미국 측과 소통 유지하고 한반도 핵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함께 추진하길 원한다”고 발언함.
-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이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 발휘한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 측은 중국 측과 함께 공동 관심의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CCTV는 보도함.

2017. 8. 13.

■ 트럼프 미 대통령·시진핑 중국 주석 전화 통화...북한 문제 논의(미국의소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시각으로 11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힘.
- 백악관은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 후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은 또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힘.
- 두 정상은 또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밝힘.

2017. 8. 14.

■ 中, 美에 무역전쟁 경고...“무역보복 조치 부메랑 될 것”(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 타임스는 14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슈퍼 301조 적용 등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함.
- 글로벌 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 정부를 향해 대규모 항의에 나설 것이다”고 주장함.
- 환구시보도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 적용을 고집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해 무역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함.

2017. 8. 15.

■ 트럼프 대통령, 중국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행정명령(미국의소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가 관련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지적 정보에 대한 누설을 강요 받는 행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미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역 전쟁에는 미래도, 승자도 없다”면서 “양측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고 발언함.

■ 신화통신, 美에 “일방주의 행동으로 문제해결 못해” 경고(연합뉴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조사 방침에 대해 일방주의 행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함.
- 신화통신은 15일 논평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행동이 양국의 무역불균형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런 행동은 상대방 뿐아니라 자신을 더욱 해칠 수 있다고 밝힘.
- 통신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유래한 ‘301 조사’는 1980년대말 미일 무역분쟁중 자주 사용됐지만 일방주의 색채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만을 초래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성립 이후에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효용 가치를 잃었다”고 주장함.

2017. 8. 16.

■ **美中 군 수뇌부 협력강화 합의…던퍼드, 북중 접경부대 방문(연합뉴스)**

- 16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과 팡펑후이(房峰輝)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전날 오후 베이징에서 만나 ‘중미 양군 연합참모부 대화 체계 문건’에 공동 서명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함.
- 팡 총참모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군 간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며 “양군 간 협력은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다”고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에 대해 던퍼드 합참의장은 “미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양국 지도자가 계획한 협력 체계와 공동인식을 달성하길 원한다”면서 “양군이 협력 영역을 넓히고, 협력관계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함.

2017. 8. 17.

■ **中, 美 한미연합훈련 지속 발표에 반발…“쌍중단이 최선”(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북핵문제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일축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반발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복잡한 현재 상황에서 쌍중단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함.
- 화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한 상태”라며 “북한과 미국 등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국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진핑, 미군 합참의장에 “북중접경 방문, 미중 군사관계 진전”(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동북지방을 방문한 것은 미중 군사관계가 진전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함.
-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은 지역과 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국이고 양대 경제권이며 세계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글로벌 번영을 촉진하는

사명을 잃어지고 있다”고 발언함.

- 특히 근년들어 양국군대가 군사적 상호신뢰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실무협력 등 각 분야에서 진전을 거뒀다며 새로 체결한 ‘중미양군 연합참모부 대화채널 문서’는 양국관계 발전 촉진에 적극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발언함.

2017. 8. 18.

■ 무역전쟁 ‘칼기는’ 中, 보잉·콩·자동차 대미 보복카드 만지작(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조사 발표 이후 이틀 연속 1면에 비난 논평을 게재한 데 이어 18일에도 ‘대중 무역전쟁, 미국은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으킬 수도 없다’라는 논평을 다시 한 번 발표함.
- 신문은 “만약 무역전쟁이 시작된다면 중국의 수중에는 많은 무기가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 보잉 항공기 총수출의 26%를 차지하고, 대두 56%, 자동차 16%, 집적회로 15% 등 미국 주력 상품의 ‘주요 구매국’이라고 강조함.
-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연구원도 이날 글로벌 타임스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이번에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조사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함.

나. 미·일 관계

2017. 8. 14.

■ 日언론 “日정부, 트럼프 9월 방일 추진...아베와 북한문제 논의”(연합뉴스)

-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월 방일설이 일본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함.
- 지금까지는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 것으로 양국간 조정이 이뤄져 왔으나, 신문에 따르면 긴박해진 북한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본측이 9월 방일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내달들어 북한과 일본의 정치 일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9월 방일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2017. 8. 15.

■ **트럼프-아베 통화..“北미사일 발사 강행 저지가 최우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미군기지가 있는 괌 주변 해상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함.
- 아베 총리는 통화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힘.
- 두 정상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미군과 자위대의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교도통신은 전망함.

2017. 8. 17.

■ **美日 “북한문제 긴박상태 계속”...日방위상 “다양한 제재 필요”(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북한문제와 관련해 꽤 긴박한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NHK가 17일 보도함.
- 미일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회(2+2)를 위해 방미 중인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이 현지시간으로 16일 워싱턴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짐.
- 오노데라 방위상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취재진에 “외교 노력으로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제재나 같은 국제사회의 압력 등 다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발언함.

다. 미·러 관계

2017. 8. 14.

■ **러 외무부 “한반도, 무력충돌 위험에 아주 가까이 접근”(연합뉴스)**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자국 TV 방송 ‘로시아1’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태가 군사적 경계선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무력충돌 가능성에 아주 가까이 가 있다”고

진단함.

- 자하로바는 이어 “미국은 무력충돌의 결과와 (그로 인해) 역 내의 모든 국가가 피해를 볼 것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 결과의 심각성을 숙고할 것을 주문함.
-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한반도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수사가 북한과 같은 수준에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함.

■ **마.러, 한국전 포로·실종자 확인 공동위 실무회의 열어(자유아시아방송)**

- ‘미국·러시아 전쟁 포로·실종자 공동위원회’ 산하 한국전쟁 실무그룹 전문가 회의가 지난 10, 1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14일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임무 수행 중 격추된 미군 공군기 조종사와 승무원의 생사 확인과 유해 발굴과 관련한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고 러시아 측은 설명함.
-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옛 소련 공군이 작성한 전황기록 중 미군 실종자와 포로 관련 부분에 미국 측의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 등 양국 간 협력강화도 협의됨.

2017. 8. 15.

■ **러 외무부 “한반도 위기 악화하면 국제전으로 번질 수도”(연합뉴스)**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라트비아 라디오 방송 ‘발트콤’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위기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미 상황이 경계선에 도달했음을 얘기해 왔지만 평양과 워싱턴의 (도발적) 수사(修辭)를 계속 듣고 있다”고 우려함.
- 그는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수사는 동일하며 양측 모두 직접적으로 무력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마치 평양의 모든 성명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 정부 관리가 읽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함.
- 그는 “미국은 국제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도구들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잊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수만,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숨질 수 있다”고 상기시키고, 한반도 위기 사태 해법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 이행을 거듭 촉구함.

■ 러 외무차관 “美-北 판돈 높이는 위험한 게임…막다른 골목行”(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현지시간) 발간된 자국 외교전문잡지 ‘국제 사건’(International Affairs)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판돈을 높이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경고함.
- 그는 “미국은 다른 나라(북한)에 비현실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그러한 압박을 중단시키는 길이 무력적 요소로 대항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판돈을 높이는 위험한 게임이며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함.
- 라브코프는 이어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적’이라는 원칙에 점점 더 자주 의존하면서 자국과 함께하지 않는 국가들을 무릎 꿇리려 하면서 어떤 대화나 타협책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함.

2017. 8. 17.

■ 러 외무부 “美 대북 군사공격은 지구종말론적 시나리오”(연합뉴스)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사태와 관련 미국과 북한의 무력 사용에 관한 도발적 수사(修辭)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무력적 해결 시도는 대규모 비극과 모든 분쟁 당사국 주민들의 인적 희생, 인도주의적·경제적·환경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 자하로바 대변인은 전날 자국 라디오 방송 ‘베스티 FM’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공격적 성명 이행이 전 지구적 문제로 비화할 것이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과 북한 간의 위험한 게임이며 이 ‘근육’(무력) 게임은 핵무기와 핵기술을 두고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함.
- 그는 이어 “우리가 워싱턴으로부터 듣고 있는 수사(대북 군사공격 위협)가 이행되면 이는 종말론적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라. 중·일 관계

2017. 8. 13.

■ 中군용기, 오키나와 부근 비행…日전투기 긴급발진(연합뉴스)

- 중국 군용기가 13일 일본 오키나와(沖繩) 본섬과 미야코(宮古) 섬 사이 공해 상공을 비행함에 따라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오전 중국 군용기 Y-8 2대가 태평양에서 미야코 해협을 북상해 동중국해로 향했다고 밝힘.
- 이에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했지만, 중국 군용기의 일본 영공 침범은 없었음.

마. 중·러 관계

2017. 8. 15.

■ 중·러 외교수장 전화통화…왕이 “8월 위기 막아야”(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의 ‘말 폭탄’ 전쟁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15일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을 재확인하면서 진화 작업에 나섬.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부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관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함.
-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이달 실시할 예정인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다시 격화시킬 수 있다면서 무력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치 및 외교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8.12	유엔 특별보고관 “北억류 외국인, 정당한 권리 못 누려”(연합뉴스) 북 억류 입현수 목사, 캐나다 도착...“건강상태 양호”(미국의소리)
	8.14	입현수 목사 “북한이 강경한 미국을 무서워하는 듯”(자유아시아방송)
	8.15	미 국무부 “북, 주민 종교자유 완전 부인”(자유아시아방송)
		국제앰네스티 “북 정보통신 통제로 아동인권 악화 시켜”(자유아시아방송)
		美, 北 16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연합뉴스)
	8.17	미 인구문제연구소 “북한 기대수명 71.5세...한국보다 10년 이상 짧아”(미국의소리)
8.18	미 농무부, ‘북한 주민 41%,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 (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8.15	북한 “억류 미국인 문제, 지금 논의 대상 아냐”(미국의소리)
	8.16	북, 중국에 3만명 인력파견 추진(자유아시아방송)
	8.17	북한군 지휘관들 병사를 인력시장에 내몰아(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8.14	평통, 탈북민 첫 채용한다...통일정책 다룰 6급 1명(연합뉴스)
	8.15	“北주민, 남한영상 시청은 北사회 움직일 수 있는 기폭제”(연합뉴스)
	8.17	‘김한솔 피신 지원 추정’ 네덜란드 대사, 통일장관 면담(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특이사항 없음
대북지원	8.16	WFP, 내년 대북지원 예산 5천300만 달러 책정(연합뉴스)
		프랑스 정부, 유엔 대북사업에 28만 달러 추가 지원(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8. 12.

■ 유엔 특별보고관 “北억류 외국인, 정당한 권리 못 누리”(연합뉴스)

-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성명을 내고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이 여전히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 키타나 보고관은 “인도주의적 배경으로 이뤄진 임 목사 석방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에는 여전히 6명의 한국인과 3명의 미국인이 억류돼 있다. 이들의 수감 실태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대로 처우 받지 못한다는 보고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 당국에는 억류된 사람들에게 통역과 영사 접근권을 허용할 것을 촉구함.
- 키타나 보고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정권이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북미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런 이유로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의 실상이 외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그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과 그들의 보호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다뤄져야 한다”며 “대화 분위기와 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덧붙임.

■ 북 억류 임현수 목사, 캐나다 도착…“건강상태 양호”(미국의소리)

- 북한에 억류됐다 병보석으로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12일 캐나다에 도착함. 캐나다 정부가 제공한 전용 항공편을 이용해 토론토 인근 지역에 도착한 임 목사는 이날 공항에서 가족과 상봉함.
- 임 목사의 아들 제임스 임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 목사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확인함. 다만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등 신체에 변화가 생겨,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고 밝힘. 이 자리에서 임 씨는 부친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준 캐나다 정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함.

2017. 8. 14.

■ **임현수 목사 “북한이 강경한 미국을 무서워하는 듯”(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국가전복혐의로 종신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가 2년 7개월의 수감생활에서 풀려난 임현수 목사가 지난 12일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한 후 다음날 큰빛교회에서 열리는 주일예배에 참가함.
- 예배가 끝난 자리에서 교인들에게서 환영 인사를 받은 임 목사는 자신이 풀려나서 오게 된 과정과 북한에서의 생활을 설명함.
- 임목사는 북한정권이 강경하게 나오는 미국을 무서워하는 듯 했다면 자신의 석방도 관련되어 있어 보인다고 전함.

2017. 8. 15.

■ **미 국무부 “북, 주민 종교자유 완전 부인”(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정부는 헌법에 종교 자유가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종교적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지적함.
-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전 세계 199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에 관한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 활동을 이유로 외국인까지 억류하거나 추방하고 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주민의 거의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처형, 고문, 구타, 체포 등으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함. 종교적 이유 등으로 8만 명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특히 기독교인 수감자에게는 연좌제가 적용돼 친척까지도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구금돼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함.
- 보고서는 또 기도, 찬송, 성경을 읽는 행위 등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활동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전함. 특히 기독교를 북한 당국의 ‘신격화’에 도전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따라서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이 북한에서 차별과 보복,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고했다는 설명임.

■ 국제앰네스티 “북 정보통신 통제로 이동인권 악화 시켜”(자유아시아방송)

-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정보 통신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감시와 통제 등이 아동들의 인권을 더 악화시킨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힘.
- 국제앰네스티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탈북아동과 북한 내 가족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제한, 가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 교육의 목적과 아동 권리 제한 등 크게 네가지 항목으로 아동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발표함.
- 국제앰네스티는 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 상황 본 심의를 앞두고 유엔에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함. 그러면서 이 단체는 유엔이 북한 정부에 아동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주민에 대한 절대적이고, 조직적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 가족과 연락하려는 주민들의 휴대전화 통화를 차단하고 있음. 이 때문에 북한에 가족을 두고 중국이나 남한으로 온 탈북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적함.

■ 美, 北 16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을 16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함.
-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 국제종교자유 연례 보고서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비정부기구(NGO) 조사, 탈북자 증언, 언론 보도 등에 나타난 북한의 종교 탄압 사례를 전하며,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힘.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16년 연속으로 종교자유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오르게 됨.
- 국무부는 북한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고문과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 정치범 가운데도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임.
- 또 지난해 4월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모 목사는 북한 요원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소개함.

2017. 8. 17.

■ 미 인구문제연구소 “북한 기대수명 71.5세…한국보다 10년 이상 짧아”(미국의소리)

-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이 한국인에 비해 10년 이상 짧은 것으로 나타남. 또

-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민간단체인 인구문제연구소 (Population Reference Bureau)는 최근 발표한 ‘2017 세계인구 통계 현황 (2017 World Population Data Sheet)’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이 평균 71.6세라고 밝힘.
 - 기대수명은 사망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해에 태어난 아기의 예상 수명을 통계적으로 추정된 것임.
 - 인구문제연구소는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을 남자 68세, 여자 75세로 추정함. 동아시아 평균 77.5세보다 6년 짧고, 82세인 한국과 비교해서도 10.5년 짧음. 또 중국보다 5년, 일본보다는 12.5년 짧음.
 - 북한의 영아사망률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7. 8. 18.

■ 미 농무부, ‘북한 주민 41%,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미국의소리)

-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미국 농무부가 전망함. 식량 사정은 점차 나아지겠지만, 개선 속도가 느려 10년 뒤에는 아시아에서 예멘 다음으로 가장 안 좋을 것이란 지적임.
- 미국 농무부는 앞으로 10년 뒤인 2027년에도 북한 주민의 41%인 1천8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함. 미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국제 식량안보 평가 2017-2027’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농무부는 2017년 현재 북한 주민의 54% 가량인 1천36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황은 점차 개선되는 것이지만, 10년 뒤에도 식량 부족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8. 15.

■ 북한 “억류 미국인 문제, 지금 논의 대상 아냐”(미국의소리)

- 북한은 자신들이 억류한 미국인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미-북 관계 분위기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15일), 최근 뉴욕 미-북 접촉 통로를 통해 양국 사이에 억류 미국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온 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는 미국 ‘AP’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미-북 간 ‘뉴욕채널’로 억류 미국인 문제 등이 논의돼 왔다고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임.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억류 미국인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미-북 간 접촉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음.

2017. 8. 16.

■ 북, 중국에 3만명 인력파견 추진(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함경북도에 인력모집 회사까지 차려놓고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파견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당국은 연변지역에 올해 중으로 3만 명의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함.
- 현재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북한의 인력이 제일 많은 곳은 화룡시이며 파견된 인력은 대부분 옷 가공과 신발가공, 식료품가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외 왕청현과 백산시에 파견된 인력은 메주콩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힘.
- 이와 관련 중국 심양시에 파견된 또 다른 북한 소식통은 “현재 중국 전역에 파견된 우리(북한) 인력은 3만명 정도”라며 “인력파견 말고도 중국산 담배잎과 합성수지, 수산물, 피복류 등 원자재를 (북한에) 가져다 임가공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함.

2017. 8. 17.

■ 북한군 지휘관들 병사를 인력시장에 내몰아(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인민군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인력(노동)시장에 내몰아 노임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함.
- 북한 인력시장에서의 노임(임금)이 하락해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힘. 인민군 지휘관들이 돈벌이를 위해 병사들을 인력시장에 내몰면서 노임(임금)이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임.
- 14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연사군 노평리에 있는 국경경비대 본부 병사 3명이 연사읍 인민위원회 대학등록과장의 집 창고 건축일을 하다가 지붕이

갑자기 내려앉는 바람에 1명이 사망하고 두 명은 중상을 입는 사건이 지난 11일 발생했다”고 말함.

- 대학등록과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이 소식통은 “사고를 당한 병사들은 대대 정치지도원의 지시로 창고를 짓는데 동원됐다”며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집주인 대학등록과장은 국경경비대에 중국인민폐 6백 위안을 병사들의 임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폭로함.
- 소식통은 “이렇게 품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이 요즘 군부대 병사들에게 일거리를 빼앗겨 살아가기 어려워졌다”며 “싼 노임으로 병사들을 파견한 군부대 지휘관들은 병사들에 지급된 노임을 가로채 제 배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8. 14.

■ 평통, 탈북민 첫 채용한다…통일정책 다룰 6급 1명(연합뉴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정책 자문 및 건의 의제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탈북민 1명을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 국적 취득이나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이 지난 탈북민 중에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가능하며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됨.
- 민주평통이 탈북민을 채용하는 건 처음임. 민주평통은 “이번 채용이 탈북민의 정착을 돕고 공직사회 내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함.

2017. 8. 15.

■ “북주민, 남한영상 시청은 北사회 움직일 수 있는 기폭제”(연합뉴스)

-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매체 시청은 북한의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옴.
- 부산하나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15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북한에 자유의 소리를 보내자’는 제목의 바른비전위원회 신보수·안보·대북정책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함.
- 강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상물 시청을 통해 정보를 축적해 남한의 발전상을 동경하고, 북한 당국의 선전과 학습을 거짓으로 인지한다면 사상 통제의 이완과 균열로 인한 체제 내구력의 약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강 교수는 이어 “미디어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드론을 활용해 정보를 공세적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대북정보유입촉진법(가칭)’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북정보 유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7. 8. 17.

■ ‘김한솔 피신 지원 추정’ 네덜란드 대사, 통일장관 면담(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암살된 뒤 가족의 피신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로디 엠브레흐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17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만나 탈북민 정착지원 문제 등을 논의함.
-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엠브레흐츠 대사를 만나 대북정책 추진과 탈북민 정착지원 문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 조 장관은 비공개 면담에서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베를린 구상’에 입각해 서두르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함.
- 조 장관은 면담에 앞서 “탈북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감사를 표했고, 엠브레흐츠 대사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게 됐다”고 답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5. 대북지원

2017. 8. 16.

■ WFP, 내년 대북지원 예산 5천300만 달러 책정(연합뉴스)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년도 대북지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전함. WFP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북한 과도기 임시 국가전략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내년도 대북지원 사업 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예산을 5천300만 달러(약 601억여원)로 책정했다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WFP의 내년도 대북사업은 2030년까지 기아를 없애고 영양실조를 줄인다는 유엔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
- 이를 위해 북한 9개 도, 60개 시·군의 어린이 65만여 명과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매달 식량을 제공할 계획임. 또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취약계층이 식량 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
- WFP는 북한 내에서 11개의 식품공장을 운영하며 영양강화 식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포장 재료, 설비 등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프랑스 정부, 유엔 대북사업에 28만 달러 추가 지원(미국의소리)

- 프랑스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유엔의 사업에 미화 28만 달러를 추가 지원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15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프랑스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28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다고 밝힘.
- 프랑스는 지난 5월에도 이 기구의 대북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음. 이번에 제공된 자금은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재난 위험 감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면서 대북 영양 지원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이 기구는 ‘6월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식품원료를 구입해 운송하고 현지 식품공장에서 가공한 뒤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데까지 보통 6개월이 걸린다고 밝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함.